

일반 논문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홍찬숙 (서울대)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시장화가 기존 경제체계에 배태되어 진행됨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제어: 북한, 시장화, 사회 형성, 사회불평등, 배태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51501).

I. 들어가며

김일성 사후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시장 유입을 차단하며 ‘체제전환’의 예외로 남았던 북한에서도 시장이 생겨났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2000년대에 이르러 북한 정권이 체제 안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불평등 역시 일정한 한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화 이전의 불평등 및 지위 이동 체계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회이론 관점에서 수행된 북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은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인 만큼 북한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¹⁾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독일의 고전 사회학에서 근대성은 ‘사회 형성(Vergesellschaftung)’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퇴니스가 전근대적 ‘공동체(Gemeinschaft)’와 근대적 ‘사회(Gesellschaft)’를 구별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형성’을 자본주의화(마르크스) 또는 합리화(베버)나 개인화(짐멜)로 설명하는 등 다양한

1) ‘다양한 근대성’에 대해서는 Shmuel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vol. 129, no. 1 (Winter, 2000), pp. 1-29을 보라.

관점들이 나타났다²⁾. 프랑스의 고전 사회학자 뒤르켐은 전근대적 공동체의 유대를 ‘기계’에, 근대적 사회 유대를 ‘유기체’에 비유했다.³⁾ 최근까지도 사회학은 사회의 이념형으로 ‘서구 사회’를 준거로 삼기 때문에, 독일 등 후발 산업국의 나치즘·파시즘적 근대화 경로나 소련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근대화 경로 또는 탈식민지화의 근대화 경로를 근대화 이론으로부터 배제해왔다.

근대화 과정의 다양성을 강조한 연구는 사회학 이론 분야보다 정치연구의 관점에서 더 일찍 수행되었다. 사회학자 무어는 자유주의적·민주적 경로 외에 일본의 파시즘적, 중국의 공산주의적 근대화 경로를 구별했다.⁴⁾ 한편 정치철학자 아렌트는 1, 2차 대전 사이 서유럽 외 유럽 지역에서 진행된 근대화를 ‘전체주의적 경로’라고 불릴 만한 것으로 묶어서 설명했다.⁵⁾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을 아렌트는 ‘계급’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새로운 집단관계 형성으로 설명했다. 시민계급의 주도 또는 시민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 및 전개되는 고전적 형태가 아니라, ‘계급 붕괴’로 인해 대중 정치에 의해 개인과 집단 간의 차이 자체가 소멸하는 집단화를 자본주의 후발주자들의 독특한 근대화 형태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사회주의(나치즘)와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모두 포함된다.

2) 하르트무트 로자·다비드 슈트렉커·하르트무트 로자 저, 최영돈 외 역, 『사회학 이론』 (파주: 한울, 2016).

3) 이와 반대로 뒤니스는 공동체를 유기체로, 사회를 기계적인 집합체로 정의했다. Gérard Raulet, “Die Modernität der »Gemeinschaft« in Micha Brumlik & Hauke Brunkhorst, eds., *Gemeinschaft und Gerechtigkeit*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3), p. 73.

4)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93[1966]).

5)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파주: 한길사, 2006), 15-69쪽.

전체주의에서는 이처럼 대중동원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거의 완전히 동일시되므로, 이런 근대화의 결과를 개인/집단 또는 공/사의 제도적 구별에 기초한 ‘사회’와 구별되는 ‘총동원 체제’라고 하겠다. 즉 총동원 체제 형태의 집단관계에서는 근대적 ‘사회’에서와 달리 개인주의 규범이 수용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공동체’와 비교해도 총동원 체제에서는 ‘개인적인 것’의 소멸 정도가 오히려 더 크다. 계급 발생 이전의 친족공동체나 아시아 왕권 국가 아래 신분제 공동체, 서구의 봉건적 농촌 공동체 등에서도 개인들 간의 상부상조와 호혜성의 ‘자율적’ 공동체 영역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자율적 협력관계가 근대의 개인주의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도덕적인 공동체 관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⁶⁾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적인 것’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최근까지도 스탈린주의 체제의 잔여가 여전한 북한은 ‘사회’가 아닌 ‘총동원 체제’로 근대화하는 경로를 취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전반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북한은 정치적 시민계급의 형성을 차단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근대적 ‘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경험했으나,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체주의적인 총동원 체제로 제도화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시장 활동이 시작되어 개인과 집단 간에 균열이 생기면서, 다시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시장 행위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불평등은 기존 체제가 완전히 통제할 수

6) ‘선물경제’의 원리로 설명되는 ‘호혜성’은 시장의 등가 교환보다 한층 다차원적인 공동체적 교환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인류학에서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마르셀 모스 저, 류정아 역, 『증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및 A. Sahlins,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1972) 참조. 사회학자 배링턴 무어는 서구의 중세 농촌 경제를 ‘도덕경제’로 설명했는데, 이는 신분제에 기초한 호혜적 교환에 대한 설명이었다.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권현익·정병호는 인류학의 ‘전면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개념에 기초해 북한의 가족주의적 경제를 ‘도덕경제’로 설명했다.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228쪽.

없는 '사회'의 시공간을 창출한다. 그러나 그 역시 시민계급의 형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동원체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이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이 논문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관점을 추려보면, 우선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⁷⁾ 예컨대 북한 체제를 “영토에 나타나 있는 전통적 제도, 전체주의적 제도, 그리고 산업사회적 특징의 독특한 전체적 총체를 지칭”⁸⁾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을 '사회'와 구별되는 '총동원 체제'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산업사회적 특징'을 관찰하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북한에서 시장 활동이 발생하고 용인되면서 발생하는 변화

7) 한동호 외, 『북한에서 국가-사회 양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노현중,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8) 한동호 외, 『북한에서 국가-사회 양상 연구』, 81쪽에서 인용.

를 설명하기 위해 ‘혼종(hybrid)’ 개념을 제시하거나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향을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이질적인 체계적 현상들이 뒤섞여 나타나므로 단일한 체계 개념에 기대어 북한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다소 단순한 방식으로 ‘혼종’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⁹⁾ 이 경우 ‘혼종성’은 ‘중범위’ 이론화 수준의 개념으로서, 경험적으로 관찰된 결과들을 기존의 이론들과 비교하기 위해 다소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론적 논의가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혼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그 ‘혼종’이 ‘배태되어 있음(embeddedness)’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또 다른 경향은 현대 신유물론의 ‘혼종성’ 개념을 북한 연구에 적용하는 경우인데,¹⁰⁾ 여기서는 기존 북한 연구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을 비판한다. 즉 전체주의/시장화, 집단주의/개인주의 등의 양극단 개념에 기대어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북한 사회가 변화한다는 식의 설명이 현실의 복잡성(혼종성)을 사상하는 ‘신화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변화가 “시장 논리로 말끔하게 대체-재구성되는 되는 것이 아니므로) ...

-
- 9)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 (2016), 155~189쪽;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 (2019), 193~226쪽.
- 10) 한재현, 「개별화-전체화의 혼종양식으로서 북한의 ‘집단주의’—북한 사회의 개인화」 연구를 위한 서설— 『개념과 소통』 25호 (2020), 147~181쪽; 한재현·고유환,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113~157쪽. 혼종성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이 사용되기도 한다.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47~78쪽;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a), 283~316쪽; 홍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b), 106~170쪽;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경제와 사회』 94호 (2012), 13~38쪽.

시장의 논리는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embedded) 작동¹¹⁾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사회 간의 각축과 갈등 또는 국가·사회의 세계체제 편입과 관련한 갈등¹²⁾을 보아야 하고, 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 변화를 이분법적 치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화-개별화라는 주체성의 양식에서 ‘개인화’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조건으로 변화¹³⁾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집단관계에서 변화하는 요소 및 과정들의 배태성(embeddedness) 및 탈배태성(disembeddedness)이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필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혼종성’이라는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개념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런 시대적 착종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일 철학자 블로흐의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같은 ‘역사적’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¹⁵⁾ 이런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인용하는 이론들이 탈사

11) 한재현·고유환,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117쪽.
 12) 위의 글, 125쪽.
 13) 한재현, 「개별화-전체화의 혼종양식으로서 북한의 ‘집단주의’—북한 사회의 개인화 연구를 위한 서설—」, 150쪽.
 14) 이런 이론적 관점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신유물론적 ‘혼종성’ 개념에서 출발하여 실제 경험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했다. 최선경, 「북·중 접경지역의 국경 형성과 ‘조선인’의 혼종성」 『아세아연구』 제62권 1호 (2019), 85~119쪽;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159~190쪽; 차문석,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 (2021), 35~72쪽.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15) 후발 자본주의화한 독일에서 1930년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나치즘이 확산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에른스트 블로흐는 독일 근대성의 특징을 시대적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설명했다. 한국에서 이 개념은 ‘압축적’ 발전 또는 근대화 등의 개념을 통해 사용된 바 있다. 홍찬숙, 「압축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과 한국의 근대화에서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덕 외,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서울: 지식과 교양, 2017b), 89~118쪽 참조.

회주의 체제전환에 이미 성공한 사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북한에도 특유의 근대적 ‘사회’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필자는 신유물론 사회학의 시조 격인 짐멜의 ‘서구 근대화=사회 형성/개인화의 동시성’ 테제¹⁶⁾에서 출발하고자 한다.¹⁷⁾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서구적 경로의 근대화와 달리 ‘사회의 발생=개인의 발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총동원 체제화의 방향으로 근대적 제도화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시장 행위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다시 해방 후 공간에서처럼 ‘사회 형성=개인 형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시장화는 결국 북한 총동원 체제의 ‘도덕경제’¹⁸⁾에 ‘배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장 행위를 통해 북한에서 현재 발생 중인 ‘사회’ 및 ‘개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 구체제로부터 ‘탈배태’될지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탈배태(disembedding)의 과정이 북한 주민과 권력기관, 그리고 물질적 조건들의 복잡하게 얽힌 수행성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떤 분명한 사건의 형태로만 관찰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신유물론적 ‘혼종성’ 관점은 변화의 이런 ‘비결정성’을 지적하는 ‘존재론’적 관점

¹⁶⁾ Georg Simmel, *Sozi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하르트무트 로자 외, 『사회학 이론』, 113~139쪽.

¹⁷⁾ 오늘날 짐멜은 신유물론 사회학자로 분류되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독일 사회학자 하르트무트는 슈트렉커, 콧트만과 함께 쓴 저서에서 짐멜의 사회학적 방법론을 ‘방법론적 상호작용주의’로 작명했다. Hartmut et al., 『사회학 이론』, 119쪽. 이것은 짐멜에 대한 신유물론적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하르트무트는 특히 비판이론과 신유물론 간 비교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다. Rosa Hartmut et al., *Critical Theory and New Materialisms* (New York: Routledge, 2021).

¹⁸⁾ 권현익·정병호가 『극장국가 북한』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

Ⅲ. 북한의 ‘사회’와 ‘사회불평등’

1. 북한의 ‘사회’

1) 탈식민지 인민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가능성

사회학적으로 ‘사회’란 서구 중세 봉건제 지배하의 신분제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한 새로운 ‘무리 지음’의 형태를 일컫는다¹⁹⁾. 그렇게 개인과 집단이 의미론적으로 분리되면서, 근대적 집단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조선의 신분제 정치 및 그 지배하에 있던 농촌 공동체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이 근대 사회의 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사정 속에서, 해방 후 북한에서 ‘혁명’은 근대적 사회 형성을 앞당기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1946년 3월부터 시작한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 계급이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²⁰⁾. 토지개혁을 통해서, 근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친일파와 전근대적 지주층이 몰락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이처럼 전근대적 지배 관계를 허문 토지개혁은 근대적 ‘사회

19) Simmel, *Soziologie*, 하르트무트 로자 외, 『사회학 이론』, 113~139쪽.

20)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 (서울: 창비, 2010), 55~57쪽.

21) 1946년에는 북한에서 토지개혁(3.5), 노동법령 발표(6.26), 남녀평등권법령 발표(7.30) 등 ‘민주개혁’이 추진되었다.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고양: 역사비평사, 2018), 252쪽.

형성'의 측면에서는 양가성을 띠게 된다. 해방 후 활발히 확대되던 자율적 인민위원회 체제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볼렀기 때문이다. 소련군 진주 이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북한의 전 지역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인민위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어, 일반인들이 근대적 정치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북한은 소련식 일당 독재 정치 모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개혁을 통해 한층 강해진 북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밑으로부터의 자율적 정치 움직임이 종말을 맞게 되었다²²⁾.

한편 일당 독재 구축 과정에서도 사회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유지되었다. 경제적으로 복수 소유권이 인정되고 시장 기능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²³⁾ 즉 일제 소유였던 중요 기간산업은 국유화했으나 중소 규모 기업과 상업은 아직 사적으로 소유되었고, 농업은 개인농 중심의 소농체제였다. 농촌의 공동체적 노동방식 역시 이런 중소 규모의 사적 소유 체제 아래서 자율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때까지는 북한에서 근대적 '인민민주주의' 사회 형성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²⁴⁾ 여기서 '인민'이란 소시민과 진보적 자본가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 토지개혁 역시 농민에게 자발적으로 토지를 나눠준 '양심적 지주'들의 건물과 물자 등을 보호하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1948년경 2차 토지개혁이 실행되면서, 이들마저 축출되었다.²⁵⁾

22)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52~53쪽.

23) 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 조치에 따라 국유화한 경공업 공장들 가운데 85% 이상이 민간에 방매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까지도 국가가 운영한 경공업 공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당시까지는 반식민지 반봉건의 민족경제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소유를 금했던 소련과 달리 북한의 1948년 헌법에는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와 함께 개인 자연인과 개인 법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한 '개인소유' 조항이 들어 있었다.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122쪽, 126~127쪽.

24)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54~55쪽.

2) 총동원 체제의 제도화와 ‘사회’의 소멸

1948년 철수를 앞둔 소련군은 유고슬라비아에서처럼 북한에서도 민족주의가 분출할 것을 우려하여 국제주의 사상과 계급투쟁노선을 보급했다. 그리하여 계급투쟁노선이 북조선노동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되었다.²⁶⁾ 그러나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사유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했으므로, 계급투쟁노선과 법체계가 부딪치는 딜레마가 계속되었다.²⁷⁾ 예컨대 1948년 3월부터 민간상공업 부문을 겨냥해 공세를 가하다가, 1949년 6월에는 민간상공업 지원정책을 재천명하기도 했다.²⁸⁾

북한 체제 변화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을 서동만은 한국전쟁으로 보았다.²⁹⁾ 한국전쟁을 계기로 통치체제가 재편되고 농업 집단화의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³⁰⁾ 한국전쟁으로 중국군이 주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적 개조’가 수행되었고, 이는 1958년에 완료된다. 그 결과 협동조합이

25)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27, 35, 247쪽 참조.

26) 위의 책, 303쪽. 북조선노동당은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으로 이루어졌다. 상인, 기업가가 조선신민당 당적을 가졌는데, 1946년 2월부터 조선공산당은 여러 방식으로 이들의 당적을 박탈하고 비근로자층의 입당을 봉쇄했다. 위의 책, 307~308쪽.

27) 위의 책, 416쪽.

28) 위의 책, 548쪽.

29) 이와 달리 김재웅은 북한에 소련과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론’이 도입된 1948~49년 사이에 이미 현대 북한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본다(위의 책, 8쪽).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의 폭격으로 북한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까지 모두 초토화되어 “시공간의 전복”이 일어났으므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가 정비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 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창비, 2013), 8쪽). 여기서 ‘시공간의 전복’이란, 당시까지 조선에서 가장 산업화했던 북한 지역을 석기 시대처럼 토굴 생활로 되돌린 초토화의 결과를 이른다.

30)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57쪽.

국가화하고, 시장이 철폐되며, 사회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민민주주의적 독재’의 종말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선언이었다.³¹⁾ 이것을 서동만은 “근대의 초극” 또는 “근대의 부정”³²⁾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가 근대성을 ‘사회’, 특히 민주주의화하는 사회와 동일시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앞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을 통해 잠깐 언급했듯이, 근대 사회의 발생이 반드시 민주주의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정치의 발생을 아도르노 등 독일 비판이론가들은 ‘근대성의 야만’이라고 불렀다. 여하튼 이후 중소분쟁의 와중에 북한이 주체 노선을 택하면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북한은 수령제, 유격대국가, 유일사상체계를 표방하게 된다.³³⁾ 그리하여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주석제가 성립했다.³⁴⁾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1980년 이후에는 유교적 전통을 부활시키며 ‘가족국가론’이 등장한다.³⁵⁾ 이렇게 해서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제도화한 북한 체제를 와다 하루끼는 ‘유격대국가’, ‘가족국가’, ‘극장국가’라는 개념들로 설명했다.³⁶⁾ 즉 1970년대 유일사상체계 확립 운동 과정에서, ‘유격대국가’라고 부를 ‘전사 공동체’가 구성되었고, 1980년대부터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서 유교 논리를 동원하여 ‘주체의 혈

31) 위의 책, 62~63쪽.

32) 위의 책, 65쪽.

33) 위의 책, 66쪽.

34) 위의 책, 271쪽. 1972년 헌법에서는 개인 자연인과 개인 법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금지하고, 소비 목적의 개인소유만을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97쪽.

35)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75쪽. 서동만에 의하면 북한에서 1970년대 이후 유교 담론이 두드러졌고, 1980년대 들어 강화되었다.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272쪽.

36) 위의 책, 275~287쪽에서 재인용.

통'을 주장했으며, 1991년부터 '충신'과 '효자'를 강조했다.³⁷⁾

권현익·정병호는 위에서 인용한 와다 하루끼의 세 개념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카리스마적 권력이 제도화하는 세계사적 예외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하루끼의 ① '유격대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 탈식민지 혁명을 수행하는 군사공동체로 제도화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 ② '가족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 가족적 호혜 관계에 기초한 도덕경제를 제도화했다고 본다. 이처럼 군사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통치제도의 성립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권력을 영속화하는 기획으로서, ③ '극장국가'라는 대중 총동원 체제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총동원 체제는 김일성 사후에 도덕경제가 붕괴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았다.

필자는 위의 분석들을 참고하여,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시작하여 유일 사상과 유교 전통 부활로 연결되며 완성된, 그리하여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까지 유효했던 북한의 집단체제를 '총동원 체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³⁸⁾ 이 시기에 북한이 전근대적 신분제 공동체로 퇴조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과거 '인민민주주의 노선' 아래서 싹튼 근대적 사회 형성의 가능성은 소멸했다. 즉 이때부터 북한은 스탈린 체제와 유사한 고유의 근대화 경로를 확립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개인들은 새로운 집단 속으로 재구속되는데(re-embedded), 그 집단은 탈식민지 군사공동체이자 경제적으로는 도덕경제 공동체로 끊임없이 사상 동원되는, '총동원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거리'를 공/사 구분을 통해 제도화한 근대

37) 위의 책, 302쪽

38)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전쟁이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로의 전환점 인지(서동만), 아니면 1948~49년부터 북한에 도입된 계급투쟁 노선이 급격히 실현된 계기일 뿐인지(김재웅)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적 ‘사회’ 개념은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근대적 공동체와 비교하면, 그것은 오히려 근대적 대중동원을 통해 유지되는 ‘근대적’ 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총동원 체제를 ‘근대적 공동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전통적 가족주의 유교 공동체 담론이 활용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총동원 체제를 ‘공동체’로 느끼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북한을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표현하고,³⁹⁾ 또 공장기업소를 단순한 일자리만이 아닌 생활공동체로 인식한다.⁴⁰⁾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총동원 체제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섞인 귀속감으로 내면화되는 이유는, 많은 탈북인이 말하듯이 가족이 사는 고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권현익·정병호가 설명하듯이, 카리스마적 지배의 효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집단적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인구의 17~18%를 잃었다.⁴¹⁾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미국 공군의 무차별 폭격 결과 마치 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 초토화한 국토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⁴²⁾이 집단적 트라우마로 기억될 것이다. 그 기억이 ‘유격대국가’를 통해 끊임없이 동원됨으로써 공동체적 소속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예컨대 독일 나치 세력은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이것은 1차 대전 패전국 독일에 부과된 천문학적 전쟁배상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남한에서도 정치적 연대감의

39) 조천현, 『탈북자』 (과주: 보리, 2021), 26~110쪽.

40)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서울: 선인, 2018), 75~76쪽.

41)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233쪽.

42)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서울: 창비, 2021).

성격 변화는 재난과 그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북한 침공에 대한 트라우마는 독재 체제에서도 정치적 저항을 억제하는 이념 공동체 의식에 밑거름이 되었다. 반면에 광주항쟁의 지역적·국민적 트라우마, 세월호와 메르스 국가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등은 정치 민주화와 관련된 시민적 주권 의식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⁴³⁾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지, 이 시기 북한은 결국 ‘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종료하고 ‘총동원 공동체’로 제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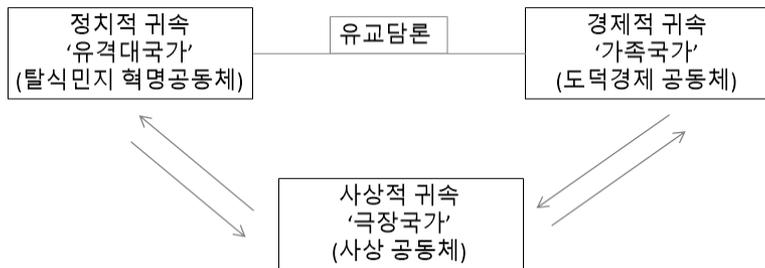
이 근대적인 ‘총동원 공동체’를 권헌익·정병호의 분석을 참고하여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여기서는 당과 관료 등의 정치적 집단화, 협동조합과 국유산업체 등 경제적 집단화, 문화예술 집단화 등의 근대적 제도분화가 나타난다. 근대적 ‘사회’ 개념에서는 사회적 행위영역 및 제도의 분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거나 ‘개인주의적’으로 조율된다고 설명된다.⁴⁴⁾ 즉 ‘사회’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현한 사회 체계에 의해

43) 세월호와 메르스 재난과 관련한 정치적 연대감의 변화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음 논문들 참조. 홍찬숙, 「위험사회의 정보유포매체와 세월호 참사의 ‘국민재난’ 되기」, 이재열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서울: 오름, 2017a), 69~114쪽;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2호 (2018), 147~179쪽; 홍찬숙, 「한국형 위험사회와 물질적 전화: 세월호 및 메르스 재난의 정치 행위성」 『담론 201』 제22권 2호 (2019), 7~30쪽.

44) 분화한 사회에 대한 유기적 통합론은 뒤르켐의 사회유기체설에서 출발한 현대 기능주의 사회학의 주류 관점이었다. 반면에 마투라나의 복잡계 인지생물학에 기초하여 기능주의를 체계이론으로 수정한 독일 사회학자 루만은, 근대 이후 복잡한 사회분화 및 그것의 기능적 조율이라는 통합 방식이 개인주의 규범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했다.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따라서 세계화 이후의 세계사회를 다룬 10년 후의 저술에서 그는 기능주의를 포기하는데, 그 이유는 소통만이 세계화하고 개인주의 규범은 세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Niklas Luhmann,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1 &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

규정된다는 ‘역설’이다. 그러나 <그림>으로 표현한 ‘총동원 공동체’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분화된 각 영역은 ‘사회’라는 개인 외부의 어떤 체계의 발현이나 창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과 아버지 수령 등의 정치 지배자에 의해 ‘목적 의식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통합된다. 그 사상 통합을 위해 분화된 영역이 ‘극장국가’로 표현되는 예술 영역이다.

<그림> 북한의 총동원 공동체



자료: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13).

또 198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이 유교담론을 동원함으로써, ‘유격대국가’라는 항일·반미 혁명군 방식의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생존 영역을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 수령’ 개념을 통해 직접 연결했다. 즉 ‘총동원 공동체’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분화가 전근대적 ‘미신’이 아닌 근대화 논리와 카리스마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다.⁴⁵⁾ 그러나 분화된 영역들의 통합이 ‘사회’ 방식이 아닌 ‘믿음’(사상 동원)을 통해서 이

⁴⁵⁾ 한성훈, 『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2019), 144~146쪽.

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보다는 전근대적 ‘공동체’에 가깝다고도 하겠다. 반면에 이 사상적 지배는 종교적 ‘교리’를 뛰어넘는 근대적 대중 동원 및 감시의 ‘합리적’ 기술에 의존한다.

한편 윤철기는 시장 출현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는 북한의 체제 통합 수단을 이데올로기와 억압적 기제들로 구별했다.⁴⁶⁾ 이것을 위의 〈그림 1〉과 비교하면, 이데올로기는 ‘유격대국가’의 혁명 이데올로기, 억압적 기제들은 ‘가족국가’의 도덕경제적 구속 기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을 계속 연결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극장국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하루키로부터 내려오는 ‘유격대국가’ 개념을 ‘시간’에 대한 규정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형태로 이해한다. 충동원 체제 아래서 (특히 ‘극장국가’를 통해서) 북한의 시간은 여전히 해방 직후 또는 한국전쟁 직후의 ‘혁명의 시간’이자 ‘전쟁의 시간’으로 고정된다. 시간을 이렇게 과거에 묶어 고정하려는 통치방식은 중국이나 소련 등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북한에서 이것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에서 친일 잔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한국전쟁의 휴전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으로서 북한은 언제든 다시 혁명전쟁의 현장이 되어 미국에 의해 초토화될 수 있다고 인식된다. 반면에 시장에 의한 체제의 균열은 북한의 시간을 알 수 없는 ‘미래’로, 공간을 중국·남한·미국 등 외부와의 ‘교류 공간’으로, 즉 불확실성의 시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마당을 현실로 경험한 젊은이들의 삶을 과거 ‘혁명의 시간’과 ‘전쟁의 시간’으로 고정해야 하는 일은 북한 정권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시장화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질적 감각과 인식을 창

46)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182쪽.

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균열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도덕경제의 연결점들을 느슨하게 풀으로써 체제 유지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다.

3) 다시 인민독재로: ‘사회’의 부분적 귀환

김일성 사후 북한 사회는 경제 영역이 붕괴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접어들었다. 권현익·정병호는 이로 인해 가족국가가 보장한 도덕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유격대국가-가족국가-극장국가’ 삼위일체를 통해 구축한 ‘카리스마 권력의 영속적 제도화’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동원 공동체의 그와 같은 균열을 통해, 오히려 과거 총동원 체제 속에서 소멸했던 ‘사회’가 다시 귀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력갱생’을 하라는 국가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배급이 중단되고, 사회주의 공식 경제가 멈추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김일성 사망 전인 1992년에 이미 북한 헌법이 개정된 바 있다. 거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규정이 폐기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규정이 부활했다. 서동만은 “경험 가운데 ‘근대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경험을 되살리고 그 의미를 다시 되씹어 보는”⁴⁷⁾ 것이 북한 체제가 풀 과제라고 했다. 복수 소유권 인정, 시장 요소 활용, 정치적 다원성의 부분적 용인 등이 과거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된 헌법 아래서 고난의 행군 이후 일련의 경제개조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주민의 시장 활동이 인정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상점 운영방식도 국영이나 위탁판매에서 임대제로 바뀌고 있다.⁴⁸⁾

47)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 81쪽.

경제적 자율성은 물론 제한된 정도로만 허용된다. 사적 자본축적의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영리활동은 공식적 조직과의 연계 속에서만 가능하다.⁴⁹⁾ 또 '돈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등,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이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돈주의 출현과 소비의 확산 및 불평등 등의 새로운 현상들 자체가 '자본주의의 맹아'라거나 '체제 붕괴의 조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적 '부'—생산수단의 사유화란 의미에서 '사유재산'이 아니라—의 발생이 기존 체제 내에서의 신분 상승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⁵⁰⁾ 이처럼 경제적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이 생겨나며 나타나는 제반 양상들을, 정병호는 한국 개발독재 시대의 산업화 양상과 비교했다.⁵¹⁾

그러나 한국의 개발독재와 비교할 때, 북한 인민독재 아래서는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본래 의미의 '사유재산제'가 금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영리활동 결과 중 상당 부분이 공식 조직을 통해 도덕 경제 부문으로 유입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비사회주의”⁵²⁾라는 명분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인민독재로의 회귀를 통해 체

48)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67~68쪽.

49)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 (2020), 7~47쪽;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19~92쪽.

50)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서울: 창비, 2020), 310쪽.

51) 위의 책, 303~304, 357쪽.

52)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102쪽.

제 붕괴보다 오히려 ‘사회의 조심스러운 귀환’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언론의 탈북자 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⁵³⁾

주민 감시와 관련된 북한의 사회주의적 주거공간 역시 배급체계가 무너진 위기 속에서 이웃 간의 상부상조 형태들을 부활시켰다.⁵⁴⁾ 상호감시보다는 (뇌물을 포함하는) 상호 호혜성이 자력갱생의 시대에는 더욱 적합하다. 또 남한으로 탈북해도 남한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⁵⁵⁾ 즉 북한의 ‘총동원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들 간의 자율적인 호혜 관계 역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유제 봉쇄와 사상통제로 인해서, 북한에서 확대되는 자율성이 정치적 공론장 형성으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⁵⁶⁾

53)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조사한 언론인 조천현에 의하면, 탈북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생존이고, 체제 불만으로 인한 망명 의도는 5%에 불과했다. 또 탈북민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탈북시킬 의향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없다고 응답했고, 탈북을 후회했다. 탈북의 최종 정착지로는 한국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절반에 미치지지는 못했다. 또 처벌 없이 받아준다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조천현, 『탈북자』, 302~305쪽). 반면에 서울대학교의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중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즉 국군 포로나 월남자 가족을 찾아 탈북한, 나쁜 ‘성분’의 탈북자가 다수였다(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204쪽).

54)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327~330쪽.

55) 남한 사회의 이질성에 대한 경험은 북한 주민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도 내내 관찰되고 있다. 과거 필자가 수행한 면접 조사에서도 한 구동독 출신 여성이 통일 후 구서독 지역의 직장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일부러 월급이 더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었다(홍찬숙, 「독일 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통합: 노동시장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한정숙 외, 『독일 통일과 여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39쪽). 또 통일 후 구동서독 지역 간에 더욱 확대되는 정치문화 차이의 원인으로서, 양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 차이가 거론되기도 한다(홍찬숙, 「독일 통일 30주년: 젠더 이슈: 구동독 지역의 여성 인구유출에서 남성 청년 정치문화의 극우화까지」 『여/성이론』 제43호 (2020a), 120~121쪽).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개인들의 의도와 무관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사회’의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사회불평등의 발생은 그러한 ‘사회 귀환’의 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김화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공장체제가 ‘공장사회’로 변화했다고 설명하는데,⁵⁷⁾ 이 역시 공장의 집단관계가 ‘사회’의 형태로 느슨해짐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동시에, 북한의 공장사회가 단순한 이익사회가 아니라 생활공동체의 성격 역시 갖는다고도 했다.⁵⁸⁾ 이 역시,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익사회 관계가 연고 공동체의 재배치와 뒤얽혀 발생했던 사실과 비교될 수 있다.

2. 북한의 ‘사회불평등’

1) 시장화 이전 북한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

북한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불평등의 범주들이 사용되어왔다. 먼저 김귀옥·김채운은 ‘계급론’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북한 스스로가 발전시킨 계급론에 기초한 것이다.⁵⁹⁾ 북한 계급론의 기본은 양대 기본계급(노동계급, 협동농민)과 사회계층으로 범주화한 중간계층(근로인텔리)인데, 그것은 ‘비적대적’ 계급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⁶⁰⁾ 이 점에서 북한의 계급론은 마르크스의 ‘적대적’ 계급론과

56)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한성훈, 『인민의 얼굴』, 101~103쪽.

57) 김화순, 「생존의 정치 II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2020), 78쪽.

58)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75~76쪽.

59)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0) 위의 책, 201~202쪽.

구별되는데, 김귀옥·김재운은 북한의 ‘비적대적’ 계급론에 기초하여 북한의 해방 후 민주개혁 시기와 한국전쟁 후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 전후를 분석했다.

이와 달리 1948년 중순 ‘인민민주주의론’의 도입과 함께 북한의 계급투쟁노선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김재운은, 마르크스의 ‘적대적’ 계급 개념에 기초하여 민주개혁 시기의 계급 관계를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1949년에 이미 북한에 노동자·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계급구조가 정착되는데, 그것은 그 전부터 추구된 계급투쟁노선의 결과였다. 즉 ‘인민국가’ 건설 운동 속에서 오히려 전국인민위원회와 사법기구 등에서 노동자·농민 출신의 권력독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⁶¹⁾ 그러나 이 시기에 법적으로는 아직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기업가·상인·수공업자 등 적대적인 ‘소자산계급’이 여전히 존재했다.⁶²⁾

북한에서 ‘적대적’ 계급을 배제함으로써 ‘비적대적’ 사회주의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은 ‘성분 분류’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전체 인민을 성분으로 분류했는데, 예컨대 1947년에는 노동자·농민, 중농민·부농민, 지주, 기업주, 상인·수공업자, 사무원, 자유직업인 등을 구별했다.⁶³⁾ 성분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출신성분은 출생 시 부모의 직업을, 사회성분은 본인의 가장 오래된 직업을 의미했다. ‘성분 결정론’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학생과 간부직 지원자 등에게

61) 김재운,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51~110쪽.

62) 1948년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 기간산업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이나 상업을 자유로이 하도록 했다. 또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했다(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9쪽).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독재가 부활한 1992년 헌법이나 이후의 경제개혁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중소 규모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두 금지된다. 소비 재화의 소유권과 주택 점유권 등만이 상속 가능하대(한성훈, 『인민의 얼굴』, 68쪽;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326쪽).

63) 김재운,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319쪽.

자신의 8세 이후 삶을 상세히 기록한 자서전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를 통해 개인들의 지위 변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분이 지위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1949년경에 이르면 노동자·빈농 위주의 간부양성체계가 정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자·고농·빈농이 북한의 지배계급이자 특권층으로 등장했다.⁶⁴⁾

‘성분’이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지위 이동에서 핵심적이라면, ‘계급’은 무엇보다 소비재의 분배(특히 배급)와 관련된 차등적 지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⁶⁵⁾ 그리하여 노동자와 농민(고농·빈농)은 지배계급으로, 인텔리는 ‘근로자층’과 ‘소시민층’의 이중적 속성을 갖는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사무원’은 인텔리와 구별되는 ‘중간층’으로서, 일반사무원·교원·기술자·기자 등 사무직 피고용자를 의미했고 초기에 당원으로 흡수되었다. ‘소시민층’에는 상점 주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종교인·문학자·예술인·인텔리·사무원까지 포괄되었다.⁶⁶⁾ 그러나 ‘중간층’이나 ‘소시민층’은 배급에서의 차등뿐만 아니라, 지위 이동의 기회에서도 차별받았다. 결국, 계급은 ‘성분’으로도 분류되어 세습되었다.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가장 중요한 불평등 범주는 세습계급으로서의 ‘성분’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체제가 제도화하면서, 노동당 입당 심사와 당적 유지, 고등교육 진학 기회, 장학생 선발 등 지위 성취를 위한 기회에서 출신성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번 등록된 출신성분은 영구히 변경될 수 없었다.⁶⁷⁾ 1970년 이후로 출신성분은

64) 위의 책, 319~340쪽.

65) 위의 책, 355쪽. ‘성분’이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위계를 의미하므로, 최봉대는 ‘정치적 신분체계’로, 윤철기는 ‘정치적 계급체계’로 분류했다.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66) 김재웅, 위의 책, 385~399쪽.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계층’ 개념은 지위 성취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핵심계층은 능력만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하나, 동요계층은 충성심을 확신시키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대계층은 체계적으로 성취 기회에서 배제되는, 온전한 세습적 지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북한을 ‘총동원 공동체’로 규정할 때, 거기서 대중동원은 앞서 본 ‘극장국가’나 ‘유교담론’과 같은 사상적 동원뿐만 아니라 지위 이동성에 따른 권력 및 재화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이익구조의 차별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중하급 간부의 핵심은 한국전쟁의 피해자 가족들이 속한 ‘일반핵심계층’인데, 이들은 ‘유자녀 시설’들을 통해서 직업적 혁명가로 키워졌다.⁶⁸⁾ 김병로는 이처럼 ‘성분’ 제도 형성에 한국전쟁의 영향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해방 후의 사회주의 계급노선이 한국전쟁 피해로 인해서 ‘성분’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했다.⁶⁹⁾ 이렇게 총동원 공동체로서 북한은 물질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세습적 지위에 연계하는 신분제적 도덕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되고, 여기서 김일성이 유자녀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가족국가’의 면모를 갖게 된 것이다.⁷⁰⁾

67) 위의 책, 408~415쪽. 이처럼 ‘성분’은 세습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승훈·홍두승은 그것을 ‘귀속적 지위’로 재분류했다(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133쪽). 그러나 시장 활동이 용인된 현재에는 돈을 써서 출신성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310쪽).

68)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236~237쪽.

69) 위의 글, 241쪽.

70)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44~45쪽.

2) 북한의 새로운 사회불평등

북한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부유한 상인층이 거주하는 신흥 부촌이 생겨나며, 사실상의 사적 고용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 소멸했던 소자산가가 다시 등장하고, 빈부격차가 심화한다.⁷¹⁾ 한편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계층화를 관찰한 최봉대에 의하면, 북한 주민 스스로는 새로운 계층을 최상·상·중·하·극빈층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자가소비를 위한 식량 확보 수준인데, 그에 덧붙여서 최봉대는 가전제품 소비 능력(하/중의 구별)과 외화 보유 여부(중/상의 구별) 역시 계층화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⁷²⁾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돈이 권력 지위로까지 전환하는 변화는 탈북자와의 대화나 조사를 통해서,⁷³⁾ 또는 단둥의 조선족 거리에서도⁷⁴⁾ 관찰된다. 그러나 시장 부문의 이런 활성화는 사회주의 개조 이전의 인민민주주의 시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형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 이윤이 축적되어도, 그것은 소비수준의 격차로 연결되거나 현금이나 달러로 보유될 뿐이다. ‘자본가(생산수단 소유자)’가 아닌 ‘돈주(화폐 소유자)’가 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즉 ‘개인재산’이 사적 자본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71)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102~141쪽;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184~188쪽;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158쪽.

72)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10~12쪽.

73) 위의 글;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조천현, 『탈북자』.

74)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293~311쪽.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로의 근대적 정치변화는 단순한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결과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북한에서는 시민계급이 형성될 가능성을 억제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통제 속에서 시민계급은 기껏해야 과거 근대화 시기 독일의 ‘교양시민(Bildungsbürger)’ 계급⁷⁵⁾이나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의 “제2차 교양부르주아층”⁷⁶⁾처럼, 비정치적인 문화자본 소유계급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⁷⁷⁾ 그리고 북한은 그런 지식계급의 정치성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분’ 제도를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의 형성 역시 억제되는데, 그것은 노동 통제가 여전히 ‘총동원 체제’의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은 소비 행위를 매개할 뿐, 생산은 여전히 공식적인 계획경제 체계 속에서 통제된다. ‘돈주’가 사업을 위해 누구를 채용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75) 홍찬숙, 「압축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과 한국의 근대화에서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00~103쪽.

76) 질 에얄·이반 켈레니·엘리노어 타운슬리 저, 임현진 외 역,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서울: 시유시, 2007), 46쪽.

77) 구동독이나 동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근대 시기부터 교양시민 계급이 형성되어 시민사회 영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후 체제전환의 동력이 되었다(노현중,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2021; 질 에얄 외 저, 임현진 외 역,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그러나 북한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서 지식계급이라고 해도 체제 내 기술관료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불만이 생긴다면 시민계급 문화 때문이 아니라, 돈을 상납하거나 몰수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일 수 있다. 또 그것이 탈북의 이유가 될 수 있다(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 세계』, 66, 124, 127쪽). 아니면 증가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거나, ‘시장경제의 맛’을 봐서 북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조천현, 『탈북자』, 120, 181쪽). 그러나 그 경우에도 리스크가 큰 정치적 저항보다 체제 내 안주를 더 선호할 수 있다. 남한에서도 1989년 정치 민주화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성공한 행위자들이 정치적 저항보다 뇌물이나 연줄을 통해 체제 내에서 성공하려는 태도가 더 일반적이었다.

수 있으나, '고용절차'는 계획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당국에 대한 신고와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은 사적 고용은 불법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동자는 여전히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⁷⁸⁾ 이 점을 지적하면서, 윤철기는 북한의 시장화가 사실상 정치적 계급체계('성분')를 지지한다고 판단하고, 그것의 핵심을 '관료-돈주 간 후견 관계'라고 보았다.⁷⁹⁾

이상의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결과 '사회'의 부분적 귀환을 말해주는 사회불평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적대적' 계급 불평등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⁸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그렇다. 하나는 '성분'에 기초한 신분제적 공동체의 지배를 와해할 만큼 정치적 성격을 갖는 신흥 계급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노동 간의 근대적 계급갈등 역시 억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적인 시장 활동으로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이 뇌물, 준조세, 화폐개혁 등을 통해 공적인

78)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177~178쪽.

79) 위의 논문, 166쪽.

80) 윤철기는 노동자계급이 정치화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재산' 소유자가 자본가 계급으로 전환하거나 정치적 시민으로 등장할 가능성 역시 체계적으로 방지되고 있다. 오랜 '교양시민' 전통 속에서 '시민적 저항'이 조직적으로 표출된 구동독에서조차 통일 과정에서 '대중적'인 체제 탈출(exit)의 경향이 강했고, 그것이 통일의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 45, no. 2 (Jan., 1993), pp. 173~202; Steven Pfaff, *Exit-Voice Dynamics and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또 이런 통일의 특성은 통일 후 구동독 정체성으로 회귀했다가 최근 극우 정치화의 경향을 보이는 구동독 지역 정치의 불안정성과도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홍찬숙, 「독일 통일 30주년의 젠더 이슈: 구동독 지역의 여성 인 구유출에서 남성 청년 정치문화의 극우화까지」.

사회주의 경제 영역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⁸¹⁾ 시장이 오히려 ‘가족국가’의 ‘도덕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권헌익·정병호가 도덕경제의 위기라고 보았던 문제는, 이와 같은 시장 부문과 도덕경제 간의 원활한 결합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계층화를 설명한 대표적 연구자로서, 앞서 인용한 윤철기와 최봉대는 경험연구 결과에 기대어 ‘혼종성’ 개념을 중범위 이론 수준에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들은 특히 ‘후견 관계’ 또는 ‘비공식적 연결망’에 주목하여, 새로운 계층화 양상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혼종 경제’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혼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일경제가 아닌 혼종 경제’라는 설명은 단순한 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필자는 후견 관계의 연결망이 비공식적이고 ‘비법적’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고, 그것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비공식적이고 비법적인 연결망이 ‘도덕경제에 배태된 시장’을 계속 창출하고 시장이 도덕경제로부터 풀려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신경망과 같다고 본다. 즉 연결망으로 작동하는 그런 후견 관계는 사유재산 금지라는 명백한 ‘법 규정’의 이면에 ‘재산권 의미의 모호성’⁸²⁾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도덕경제에 재차 역동적으로 묶어주는 관계적 수행성이다. 또 동시에 불법, 반합법의 사적 고용 행위 이면에서 공식적 ‘고용절차’를 재차 활성화하여 노동을 통제하는 수행적 기제이기도 하다. 이 연결망의 수행성을 통해 시민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출현 가능성을 차

81)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19~115쪽;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82)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단함으로써, 북한은 시장 행위를 도덕경제 속에 계속 배태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⁸³⁾ 특히 최봉대는 ‘성분’ 신분제와 새로운 계층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 기제로서, 비공식적 연결망을 일종의 ‘사회적 자본(=신뢰 관계의 자원)’ 개념으로 제시했다.⁸⁴⁾

한편 북한에서 신분 위계의 핵심인 ‘성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영화를 분석하여 특히 ‘복잡군중’에 대한 시선이 다소 완화했다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주민들을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구분하는데, 복잡군중은 ‘성분’의 가장 하층을 구성한다.⁸⁵⁾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중반 성분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복잡군중에서 기본군중으로의 격상 가능성을 선전하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복잡군중’도 혁명의 동행자로 보는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⁸⁶⁾ 영화는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80년대 중후반~1990년대 초, 그리고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의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⁸⁷⁾

영화에서는 복잡군중이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서, 성분이 나빠도 본인의 충성심과 헌신을 통해 당원이나 노동계급 인텔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전한다.⁸⁸⁾ 주연급 복잡군중은 주로 산

83)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물론 또 다른 문제이다.

84)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85)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235~236쪽.

86) 위의 글, 240~241쪽.

87)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 정책」 『한민족문화연구』 72호 (2020), 92, 96, 104쪽.

88)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분’을 이전의 ‘핵심/동요/적대’ 계층에서 ‘핵심/기본/복잡’ 계층으로 재분류했다.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업·농업·임업 분야의 연구자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으로서, 성분 완화를 통해 경제건설에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공급한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⁸⁹⁾ 영화에 등장하는 ‘복합군중’의 성분이 월남자 가족이나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의 자녀처럼 적대적인 하층에까지 걸쳐있기 때문이다.⁹⁰⁾

3) 북한의 사회 이동성

이처럼 특히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 속에서, 신분적인 지위 이동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개인의 성취에 의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복합군중’의 사례처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능력 성취를 통해 성분 제약에서 다소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획득한 돈으로 등록된 성분을 고쳐서 지위 상승에 성공하기도 한다. 또 이런 지위 상승은 성분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결혼을 통한 지위 이동의 가능성 역시 확대할 것이다. 이처럼 지위 이동에서 신분적 경로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의 경로 역시 열림으로 인해서, 북한의 불평등이 “재계층화”⁹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에서 ‘계급’은 사회적 적대나 갈등의 축으로 작용하는 불평등 범

계층구조의 변화], 176쪽.

89)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 -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합군중’ 정책」, 116쪽.

90) 위의 글, 120쪽.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의 자녀에게까지 성분 완화를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인재 조달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 후방에서 진행된 잔혹한 학살사건의 주도자가 북한의 공식 주장과 달리 미군이 아니라 치안대 가담자들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221~223쪽. 즉 치안대 가담자 자녀까지 체제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시간을 ‘혁명과 전쟁의 시간’에 고정해두려는 사상적 시도와 충돌할 위험성이 크다.

91)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107쪽.

주지만, '계층'은 이동성을 보장하며 불평등 구조를 개방함으로써 불평등에 기초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기능주의적 개념이다. 이런 개념 규정에 충실할 때, 시장 도입과 함께 북한은 사유재산 금지를 통해 시민계급과 같은 적대적 계급의 발생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적대계층' 신분의 자녀에게도 체제 내 지위 상승 욕구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소비' 측면에서 부의 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탈북 의사가 낮으며 남한보다 "조선이 더 자본주의 같다"⁹²⁾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한 귀속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즉 사회이동의 개방성을 선전함으로써, 체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민계급의 발생을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탈북자 면접 조사에 기초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민간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로 투자되도록 '모호한 재산권' 규정을 활용하고,⁹³⁾ 권력 지위에 있는 간부들에게 '8·3노동'을 불허하여⁹⁴⁾ 정치 권력자의 경제 권력화를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⁵⁾ 이외에도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민간에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함으로써, 민간의 자본축적 가능성을 봉쇄했다.

개인 사업자들의 수입금 국가 상납은 '후방공급사업'⁹⁶⁾이라는 도덕경

92)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305쪽.

93)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94)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32쪽.

95) 체제전환 후 러시아와 달리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자본가)으로 전환하지 못한 동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체제전환 후에도 자본가 형성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동유럽과 대조하여,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화한 러시아의 경우를 예외 외는 '자본주의 없는 자본가'라고 부른대질 예외 외 저, 임현진 외 역,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36쪽. 북한은 간부들의 시장 활동을 차단하고 오히려 관직을 이용한 뇌물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제의 공동체적 명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를 위해 사업자는 국가 기관에 간부로 적을 두고, 국가에서 부지를 받아, 스스로 마련한 투자금으로 공장설비를 설치하고 원료 역시 수입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종업원도 고용할 수 있다. 상납금 외의 수익금은 스스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관의 허락하에 공장을 팔거나 상속할 수도 있다. 어업 분야의 개인 선주는 조업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를 군부대의 고정재산으로 등록한다. 그러나 공장 사업가든 선주든 자신의 사업이 등록된 기관을 바꾸어 설비를 이동하거나 배의 소속을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은 스스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상납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가져가지만, 생산수단을 지정된 국가 기관 외의 다른 곳으로 처분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⁹⁷⁾

한편 간부에게 8·3노동을 불허하면서, 간부에게는 뇌물 소득이 가능해지고, 간부 본인에게는 국가 활동을 통한 부수입 기회가 제공된다. 또 군인 등 안보와 관련된 특수직의 경우에는 직장 배급이 계속 보장되었다.⁹⁸⁾ ‘8·3노동’이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 총화 등에도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직장에 ‘8·3비’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부에게 그것을 불허한다는 것은, 간부의 시장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뇌물 수입과 가족원의 시장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된 소득으로 이들 역시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96)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202쪽.

97) 위의 글, 202~205쪽. 그런데 이것은 서구에서 근대 초 여성의 재산권을 제한한 방식과 비교될 수 있다. 당시에 기혼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었으나 처분권은 남편만이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의 소유재산이어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하고 가정주부라는 존재 양식이 출현했다. 홍찬숙, 「유럽에서 성(surname)과 가족성(family name)의 출현 및 그 의미」 『여성학연구』 제30권 2호 (2020b), 51~56쪽.

98)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30~32쪽.

이런 식으로 시민계급으로의 사회 이동성이 철저히 봉쇄되고 또 사적 부문의 소득을 공적 부문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식적 사회주의 경제가 유지된다. 즉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도 출근은 계속되는 것이다.⁹⁹⁾ 또 재산권 규정이 모호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이나 영역이 많다는 사실 역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의 ‘범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 유지에 기능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탈북의 이유로 실수나 범죄를 꼽은 경우가 생존 관련 이유 다음으로 많은 사실¹⁰⁰⁾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구조의 문제를 개인 도덕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 확대와 함께 ‘비공식적’ 사회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만큼 도덕경제의 유지 역시 가능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 도덕경제의 근간이던 ‘충효’의 유교 원리가 시장 확대를 오히려 지지하게 되는데, 이는 정병호가 말하듯이 한국의 개발독재 아래서도 일어났던 일이다.¹⁰¹⁾ 이 경우 개인의 자율성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체제 유지의 관건일 것이다. 그를 위해 북한에서는 한편으로 조직이탈자를 더욱 엄하게 단속하거나 사회주의 조직 생활과 학습을 더 강화하고,¹⁰²⁾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탈북자를 선처하는 정책을 편다.¹⁰³⁾ 또 뇌물을 주고 통행증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일이, 탈북자 증가로 인해 어려워졌어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¹⁰⁴⁾

-
- 99)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23쪽.
 100) 조천현, 『탈북자』, 302쪽.
 101)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303~304, 357쪽.
 102)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55, 99쪽.
 103) 조천현, 『탈북자』, 32, 182쪽.
 104) 위의 책, 51~67쪽. 북한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넘는 일이 전통적으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북한의 지위 이동성은 두 방향으로 가능했다. 하나는 혁명 투사나 노동자·농민 계급 등 일제하 피지배층 출신이 당 간부 등 권력 지위로 상승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친일파, 지주, 자본가, 남한 귀순자, 소시민층 등 과거 지배층과 중간층의 지위 하락이었다. 이 중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을 용인함으로써 가능해진 사회 이동성은 두 번째 방향에 대한 조정이다. 특히 시장을 통한 소비수준의 제고를 통해 뇌물로 출신성분을 바꿔 지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체제에 헌신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성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위 상승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개인적 성취만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동원 체제에서의 신분적 지위 이동과 구별되는 ‘사회 이동성’의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새로운 ‘재계층화’ 현상인 소비수준의 격차 증가 및 생활양식의 차별화는 베버적 의미에서 ‘사회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문화적 이질성의 증가가 단순한 ‘차이’나 ‘차등’이 아니라, 집단적 적대감이나 대립을 수반해야만 ‘사회계급’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배규범에서의 균열 없이, 양적 계층화만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학의 기능주의 계층론 역시 자유주의라는 지배규범의 균열 없이(=사회통합) 소득, 재산, 직업 위신, 교육수준 등의 분배지표에서만 양적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계층화’로 개념화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봉대에 의하면, ‘성분’에 기초한 공식적 지위 이동

로 찾아서,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북한 주민 간 호혜 관계의 역사가 길다. 조천현은 2001년 이후 남한 민간단체에 의한 기획 탈북이 성행하기 이전에 중국으로의 탈북자가 많았던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그렇게 생존을 위해 탈북한 경우,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에 사는 것을 선호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국경이 다시 봉쇄되었다. 위의 책, 198~200쪽.

과 시장화 이후의 사회적 계층화는 비공식적 연결망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밀접하게 연계된다.¹⁰⁵⁾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은 당사자들의 계급 관계 속에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도덕경제 배태성'을 재생산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에 여기서 비공식적 연결망은 서구적 형태의 연결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고(또는 연줄)'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최봉대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새로운 사회 이동성에서 '연고'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다. 하나는 좋은 '성분' 지위에서 가용한 연고를 이용해 중간층 이상의 계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좋은 '성분' 지위에서 연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식적 직업 권한을 이용하여 상층의 경제적 지위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는 모두 높은 성분 지위가 높은 계층 지위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또 이런 방향의 이동성에는 북한 당국의 의도적 개입이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2012년 북한 당국은 (군부뿐만 아니라) '성분'이 좋은 한국전쟁 피해자 가족에게도 외화벌이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¹⁰⁶⁾

반면에 마지막으로, 연고를 동원할 수 없는 하위 '성분' 지위에서 순전히 자신의 성취를 통해 중간층 이상의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고'는 핵심적 요소였다. 계층 상승과 함께 인위적으로 연고를 만들어야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장에 의해 계층화가 진행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고위 성분이 고위 계층으로 연결되는 신분적 지위 이동이 '연고'를 통해 매개될 뿐만 아니라 순전히 '성취'에 기초한 새로운 계층 상승 역시 '연고'와 결합하는 것이다.

105)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106)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197쪽.

IV. 나가며

이상에서 사회학의 이론적 분석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았다. 본문의 분석에서 필자가 참고한 이론적 접근방식은 권현익·정병호의 ‘호혜성’ 개념에 기초한 인류학적 접근과 ‘혼종’ 개념을 사용한 북한 전문 연구자들의 중범위 이론적 접근이다. 신유물론적 ‘혼종성’ 개념을 표방한 또 다른 이론적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험적 분석을 위해 곧바로 사용되기에는 지나치게 존재론적 차원의 이론이라고 평가했다.¹⁰⁷⁾

필자 역시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신유물론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존재론적 특성인 혼종성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근대화의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시대적 혼종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여러 시대적 특징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서 독특한 근대화의 성격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근대화 속에서 전근대적 신분제가 온존하고 또 해방 공간에서 탈식민지 근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의 발생이 억압되는 ‘총동원 체제’로의 경로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렌트의 논의를 따라, 그것의 핵심을 계급이 소멸한 대중 또는 군중의

107) 이 외에 사회학적 방향으로서 김홍중의 ‘마음의 사회학’을 인용하는 연구도 있으나,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09);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권 4호 (2014), 179-213쪽;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서울: 창비, 2020).

체제로 이해했다.¹⁰⁸⁾ 짐멜의 관점을 따르면, ‘사회’의 발생이 억압된 총동원 체제에서는 ‘개인’의 발생 역시 억압된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총동원 체제에서는 전근대적 공동체에 비해서도 ‘개인적인 것’이 현저히 감소한다. 즉 개인 간의 ‘호혜성’ 역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총동원 체제를 지탱하던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며 ‘사회’의 관계와 ‘개인’의 공간이 다시 북한에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율적 공간들은 ‘비공식적 연결망’(연고)의 관계 맺음 속에 재배치되어, 다시 사회주의 체제 속에 재배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재배태의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또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재배태의 성공적 유지를 위협하는 리스크로서, 시민계급이나 노동자계급으로의 집단화를 통한 정치적 저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만일 시장이 도덕경제로부터 풀려나도, 그것의 원동력은 집단적 저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부터 유래하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정치적 반발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명의 시간’과 ‘전쟁의 시간’으로 북한의 현 시간을 계속 소급하여 고정하는 ‘유격대국가’의 이념정치가 붕괴하면서 대중적 체제탈출(exit)의 방식이 되기 쉬울 것이다. 집단화한 정치 저항이 강했던 구동독에서조차 통일의 과정을 각인한 것은 대중적 체제탈출로 설명된다. 대중적 체제탈출의 가장 큰 문제는 체제 붕괴 이후 정치를 주체적으로 조직할 세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그런 이유에서 흡수통일이 빨라졌을 수 있으나,

¹⁰⁸⁾ 북한에서 ‘계급’ 개념을 사용함에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계급’ 개념의 핵심은 대립, 즉 정치적 저항이기 때문이다. 시민계급은 구체제에 정치적으로 저항했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 정치적으로 저항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매우 불안정하다. 현재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 지역과 달리, 극우당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 접수: 2021년 10월 31일 / 심사: 2021년 12월 4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5일

【참고문헌】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13.
- 김귀옥·김채윤,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서울: 창비, 2020.
-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고양: 역사비평사, 2018.
-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창비, 2013.
-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서울: 창비, 2021.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09.
- 김화순, 『분단 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서울: 선인, 2018.
- 서동만 (저작집간행위원회), 『북조선 연구』(서동만 저작집), 서울: 창비, 2010.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서울: 창비, 2020.
- 조천현, 『탈북자』, 파주: 보리, 2021.
- 한동호 외, 『북한에서 국가-사회 양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한성훈, 『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2019.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파주: 한길사, 2006.
- 질 에얄·이반 켈레니·엘리노어 타운슬리 저, 임현진 외 역,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서울: 시유시, 2007.
- 하르트무트 로자·다비드 슈트렉커·하르트무트 로자 저, 최영돈 외 역, 『사회학 이론』, 파주: 한울, 2016.
- 마르셀 모스 저, 류정아 역, 『증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Hartmut, Rosa et al, eds., *Critical Theory and New Materialisms*, New York: Routledge, 2021.
-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Luhmann, Niklas,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1 &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7.

Moore, Barrington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93[1966].

Pfaff, Steven, *Exit-Voice Dynamics and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Sahlins, Marshall,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1972.

Simmel, Georg, *Sozi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219~242쪽.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171~213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권 4호, 2014, 179~213쪽.

김화순, 「생존의 정치 II.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2020, 75~117쪽.

노현중,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 『경제와 사회』, 94호, 2012, 13~38쪽.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 정책—」 『한민족문화연구』 72호, 2020, 87~132쪽.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 2016, 155~189쪽.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159~190쪽.

차문석,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 2021, 35~72쪽.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2호, 2008, 7~41쪽.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 2019, 193~226쪽.

-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 2020, 7~47쪽.
- 최선경, 「북·중 접경지역의 국경 형성과 ‘조선인’의 혼종성」 『아세아연구』 제62권 1호, 2019, 85~119쪽.
- 한재현, 「개별화-전체화의 혼종양식으로서 북한의 ‘집단주의’—북한 사회의 개인화 연구를 위한 서설—」 『개념과 소통』 25호, 2020, 147~181쪽.
- 한재현·고유환,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2020, 113~157쪽.
-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47~78쪽.
-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a, 283~316쪽.
- 홍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b, 106~170쪽.
- 홍찬숙, 「독일 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통합: 노동시장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한정숙 외, 『독일 통일과 여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31~371쪽.
- 홍찬숙, 「위험사회의 정보유포매체와 세월호 참사의 ‘국민재난’ 되기」, 이재열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서울: 오름, 2017a, 69~114쪽.
- 홍찬숙, 「압축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과 한국의 근대화에서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덕 외,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서울: 지식과 교양, 2017b, 89~118쪽.
-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2호, 2018, 147~179쪽.
- 홍찬숙, 「한국형 위험사회와 물질적 전화: 세월호 및 메르스 재난의 정치 행위성」 『담론 201』 제22권 2호, 2019, 7~30쪽.
- 홍찬숙, 「독일 통일 30주년의 젠더 이슈: 구동독 지역의 여성 인구유출에서 남성 청년 정치문화의 극우화까지」 『여/성이론』 제43호, 2020a, 108~128쪽.
- 홍찬숙, 「유럽에서 성(surname)과 가족성(family name)의 출현 및 그 의미」 『여성학연구』 제30권 2호, 2020b, 39~64쪽.

pp. 1-29.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 45, no. 2 (Jan, 1993), pp. 173-202.

Raulet, Gérard, "Die Modernität der »Gemeinschaft«" in Micha Brumlik & Hauke Brunkhorst eds., *Gemeinschaft und Gerechtigkeit*,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3, pp. 72-96.

Social Inequality in North Korea:
A Soci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Society

Hong, Chan-S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a researcher of sociological theories, in this study I approach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in North Kore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various paths to modernization.' Social inequality has been a central issue in sociology, and has deeply changed in qual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neither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nor that of modernization has been dealt with seriously enough in research on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informal small markets in North Korea, a unilineal development like private capitalization has been assumed. But in reality, these markets have been embedded in the traditional socialist economy of North Korea, however unstable this process could be. I argue that informal networks are systematically utilized to continue embedding markets in the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der.

Keywords: North Korea, social inequality, paths of modernization, market, embedding

홍찬숙(Hong, Chan-Sook)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강사 및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현재 한국이론 사회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독일 뮌헨시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사회학과에서 올리히 벡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영역은 이론사회학, 젠더사회학이다.